일부 민주당원, 출마예정자 추가 고발

"공직선거법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주장

피고발인 측 "평소 관리해온 DB, 불법 아냐"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 같다"며 특정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또 다른 당원들이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법무법인 '민주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인 임모씨와 김모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입당한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 취득 및 사용에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난 2일 A씨 측으로부터 실명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규 당원들에게까지 단체문자가 발송된 것은 당원 데이터베이스가 통으로 유출됐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 명부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개인정보가 총망라돼 있어, 만약 당 핵심 간부가 연루돼 있다면 이는 A씨와 공모 또는 교사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법 유출된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나아가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인과 시민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새해인사를 핑계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발송한 웹사이트와 문자메시지 등이 몇 명에게 발송됐는지, 그 중 광주 시민과 민주당 당원이 몇 명이고, 발송비용과 제작비용의 규모와 출처 등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이에 "광주시장, 국회의원에 선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20만~30만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매년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당원 명단을 건네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적은 결코 없다. 유력 후보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후보들도 (문자메시지를) 모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신년인사와 더불어 새 정부 들어 자신이 일궈온 업무적 성과를 설명하며 신년 영상메시지도 첨부했다.

이 과정에서 글머리에 수신자 개개인의 실명을 적시됐는데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고 경쟁 후보자의 처 조카 등 신규 권리당원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명단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5만~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광주 · 전남 취학대상 아동 소재 '모두 확인'

광주 · 전남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3만2007명 중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1040명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취학대상 아동은 1만4754명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586명이 불참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각 구청 주민센터와 협력해 불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여행중이거나 건강 문제 148명, 전출 104명, 취학유예 51명, 장애 등에 따른 취학면제 170명, 미인가 대안교육 15명, 해외출국 95명, 홈스쿨링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2명은 각각 베트남과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취학대상 아동 1만7253명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454명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취학유예 · 연기가 132명, 취학면제 67명, 해외거주 237명, 기타 16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박준수 사무관은 "학교와 주민센터, 경찰과 연계해 입학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지역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해 한 명의 아이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수요집회 참석한 아베 총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탈을 쓴 참석자가 '미안합니다'(すみません)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학교 통폐합 갈등' 함평여중 대규모 전학 사태

1 · 2 학년 절반 이상 전학

함평지역 중학교 통폐합 과정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대거 전학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함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함평여중 1학년 29명과 2학년 26명 등 55명이 인근 함평중학교로 전학을 신청했다.

전학생은 1, 2학년 전체 재학생 95명의 절반 이상으로 올해 1학급이 축소될 예정이다.

올해 1학년 신입생도 단 2명에 불과해 3월 말까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학년이 폐지된다.

무더기 전학사태와 신입생 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예견됐었다.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육성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함평지역 3개 중학교(함평중, 학다리중, 나산중)가 함평중으로 통합했으나 대상이었던 함평여중은 제외됐다.

당시 재학생 144명의 학부모 중 122명이 통합 찬성 동의서를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최종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했으며 이 때 통합 함평중으로 대규모 전학사태가 예고됐었다.

하지만 함평여중 측은 학교 부지에 '교육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군이 학생 수를 줄여 강제 통폐합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함평여중 관계자는 "통폐합을 찬성하는 세력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대규모 전학사태가 벌어졌다"며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학교로 전학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함평여중은 당초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함평여중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학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도박 빠져 인터넷 상서 사기친 20대 덜미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유명아이돌 콘서트나 야구 경기 관람권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모(27)씨와 김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아이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A씨 등 39명으로부터 모두 47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구매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잠적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상에서 야구경기 관람권과 유명아이돌 공연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 등 10명으로부터 모두 2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권과 아이돌 엑소, 방탄소년단의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B씨 등을 상대로 1인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로챘다. 이렇게 챙긴 돈은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살해 경찰 "재산문제로 다투다 범행"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재산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RV차량 안에서 아내 B(55)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B씨는 운전석에, A씨는 운전석 대각선 방향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같은 날 오후 6시39분께 영천시 임고면의 한 저수지에서 추락했다. A씨는 스스로 저수지에서 빠져 나왔다.

이후 A씨는 저수지에서 300m 떨어진 집에 걸어가 아들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다"고 알렸다. 아들은 곧바로 경찰 등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국과수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1차 부검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A씨의 진술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고 지난 23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자정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평소 금전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차가 저수지 방향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왜 돈 안 줘'…선주 살해한 선원 검거

밀린 임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선주를 살해한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11시20분께 군산시 둔율동의 한 골목에서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70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의 배를 타고 5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술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